



8호 2006년 8월 19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속지 말고 반전 운동을 구축하라

‘더 많은 폭격, 더 많은 지상군 투입, 더 많은 학살.’ 바로 이것이 유엔 ‘휴전’ 결의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이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날, 이스라엘은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세를 벌였고,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의 규모를 세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뒤 베이루트 남부에는 2분 간격으로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유엔 결의안을 주도한 서방 강대국들은 이를 전혀 비난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강대국들이 정한 룰 — 유엔 결의안 — 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결코 이스라엘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결의안은 헤즈볼라에게는 “즉각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공격적 군사 작전[만]

중단”하라고 말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격이 모두 헤즈볼라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적” 작전이라고 주장해 왔고, 따라서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이제껏 하던 일을 계속해도 좋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스라엘 내각이 ‘휴전’ 결의안을 승인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치피 리브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레바논군과 국제평화유지군이 모두 배치된 뒤 레바논에서 철수할 것이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단 할루츠는 “다국적군이 배치될 때까지 헤즈볼라 소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단 한 개의 돌멩이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던진다면 이스라엘은 백배 천배의 보복을 가할 것이다.”(이스라엘 무역부 장관 엘리 이샤이) 그러나,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스랄라가 말했듯, “이

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이 계속되는 한, 그에 맞서 싸우며 영토와 집,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레바논인들의 당연한 권리다.”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유지군”이 투입되면 이스라엘군은 철수하도록 돼 있다.(물론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결의안은 국경선인 ‘블루 라인’에서 리타니 강(江) —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거의 32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 — 까지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와 전투를 치르며 가가스로 침투한 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고, 따라서 이스라엘군이 확보하지 못한 전리품을 서방 강대국들이 대신 챙겨주려는 것일 뿐이다.

“레바논의 주권 회복”과 “구호 지원”에 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

역에 투입될 “평화유지군”(최대 1만5천 명 규모)의 핵심 구실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될 것이다.

결의안은 “레바논 정부군을 제외한 모든 무장 단체[물론 헤즈볼라를 뜻한다]의 무장해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평화유지군이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맞불> 7호를 참조하시오.)

요컨대, 결의안은 레바논의 평화나 정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목표(헤즈볼라 분쇄)를 다른 수단(서방 열강이 이끄는 또 다른 점령군)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총리 올메르트가 결의안 통과 직후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까지 했겠는가.

4면에서 계속

<반전 토론회>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의 개입

연사: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등
장소: 서울보증보험 본사 3층 강당
(종로5가역 2번 출구
기독교연합회관 맞은편)

일시: 8월 19일(토) 오후 4시
참가비: 1천 원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www.antiwar.or.kr)



이스라엘과 미국의 레바논 공격 중단 촉구 반전행동

일시: 8월 26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 도심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인용해도 될까요?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이스라엘에 불평하는 미국의 네오콘 찰스 크로써머

“넘어져서 이만큼의 상처가 발생하려면 설악산 정상에서 굴러떨어져야 할 것”

— 하중근 열사가 넘어져 죽었다는 국과수 발표에, 부검에 참여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회 김진국 의사

“[반미 영화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괴물’이 둔치에 출몰해 인명을 살상할 때 ‘괴물’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인물은 한 명의 미군과 그 조력자인 박강두뿐이다. … 무능한 정부는 어찌할 비를 모른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전경어머니회’와 ‘지역상인연합회’ 같은 일반 국민이라는 게 영화의 메시지”

— <조선일보> 기고자 이두아의 영화 ‘괴물’에 대한 제 눈에 물 대가식 해석

“신부가 도망가면 다른 신부로 보상에 드립니다.” “일년간 무상 보증”

— 대만의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광고 문안

“당당하게 친미(親美)를 외쳐야 한다.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어야 한다.”

— 한나라당 의원 송영선

“내가 20퍼센트 지지받는 대통령이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나도 언젠가 됩니다.”

— 푸념하는 노무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게 정칙”

— 2002년 방북해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재향군인회 서울시회장 김병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이적행위?

외대 당국은 부당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하며 이미 직원 22명을 무더기 징계한 외대 당국이 지난 11일 ‘다함께’ 외대모임 조명훈 동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외대 당국은 ‘다함께’ 외대모임이 논술시험을 보러 온 수시모집 응시생들에게 외대 당국의 등록금 인상과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문제삼았다. “‘허위사실’을 응시생과 학부모에게 유포한 것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 당국은 <조선일보>를 통해 외대 노조가 ‘폭력 노조’라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했다.

보직교수들이 조합원을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여성 조합원들에게 “이쁜 것하고 말하니 말도 잘 나오네”, “가슴 보여, 거기나 닫고 다니지” 등의 모욕적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행동들이야말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지, 이를 비판한 것이 문제인가?

이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탄압이며, 파업 지지 활동에 대한 공격이다.

허위 사실

징계위가 열리던 날 이른 아침인데도 외대 서울캠퍼스 조합원 1백30여 명과 학생 20여 명이 함께 징계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조명훈 동지는 “표현물을 구실로 징계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며



징계반대집회에 참여한 조명훈 동지

‘다함께’ 외대모임을 공격해 노조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며 “노학연대를 통해 징계 방침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징계위원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 갑자기 장소를 변경하고는 문을 잠가 버렸다. 조명훈 동지를 한참 후에야 불러들였고 방청 요구마저 묵살했다.

회의실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은 계속해서 ‘부당 징계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성희롱법 처벌하라’, ‘우리는 원한다, 민주적 대학을’ 등의 구호를 외치

전교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교사들이 탄핵 무효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한 것이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 행위”라며 법원은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4년에 교총 회장 이군현과 교총의 주요 간부이며 초등학교 교장인 김영숙이 한 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에 당선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명백히 교사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법원은 장혜옥 위원장과 원영만 전 위원장 등에게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 교사직을 잃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차등성과급제·교원평가제 등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며 조명훈 동지를 응원했다.

외대 노조 박선영 상황실장은 “조명훈 학생을 방어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대자보와 현수막이 붙이는 족족 찢어지는데도 곳곳하게 주장하는 조명훈 학우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명훈 동지는 징계위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흔들림 없이 주장했고 징계위원들은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한 징계위원이 “이쁜 것하고 말하니 말도 잘 나오네”란 성희롱 발언이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느물거리자 다른 징계위원이 “성희롱이 맞긴 맞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습하며 우왕좌왕했다.

또 다른 징계위원은 “등록금을 올려도 학생들을 위해 많이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돈 없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지 말아야 하느냐”고 조명훈 동지가 되물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무기정학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날 보여 준 노동자·학생들의 반발 때문인지, 외대 총장은 아직 징계 결정을 결재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듯하다.

조명훈 동지와 ‘다함께’ 외대모임은 머뭇거리지 않고 학교 당국의 비열한 노조 탄압과 교수 폭력·성희롱 등을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다. 징계가 확정된다면 학생·노동자들과 함께 부당한 징계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승주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NGO 지도자들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나름의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8월 9일 강준만 교수는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정·관계에 진출한 시민운동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돼 있[어서] …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 주장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하는 제인인 데 적어도 … 역대 의 연봉, 기사 달린 고급 승용차, 비서 달린 대형 집 무실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투쟁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춥고 배고프게 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최민희 전 민연련 공동

양극화 반대와 특권은 어울리지 않는다

대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시민의 신문>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의 연봉이 9천만 원이고 전용 차량에 운전기사, 개인비서와 집무실이 배당된다

고 보도했다.

보수 언론들의 과장 보도만큼은 아니어도 실제로 “낙하산의 꽃”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감사에 임명된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은 적지 않다.

흥사단 출신의 조성두는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을 지낸 최교진은 한국토지공사 감사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출신의 배석범은 한국가스공사 감사를 지내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각각 1억 4천2백만 원, 1억 9천8백만 원, 1억 6천만 원이다.

이것은 많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연봉 5~6천만 원의 ‘대기업 노동귀족’을 비판해 온 것과도 모순이다.

물론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과 한나

라당이 이를 이용해 운동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누려 온 부와 특권은 이에 비할 바 없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나 지지자들이 느끼는 우려와 실망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실망감이 몇 년 전부터 제기된 ‘시민운동 위기론’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민중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심지어 미국의 학살 전쟁을 지원하는데도 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귀족’ 대우를 받아가며 말이다.

특혜를 받아가며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및 기층 민중운동과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더 효과적인 사회 변화 전략일 것이다.

장호중

중동 위기와 반전 운동의 쟁점들

김광일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촉발한 반전·반제국주의 정서와 급진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10만 명이 결집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레바논 침공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평화단체들의 집회가 두 차례 열렸고, 기독교와 불교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36인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레바논 전쟁 소식을 실은 <맞불> 7호는 지난주 거리 가판에서 2분에 1부 꼴로 판매됐다. 이태원의 이슬람성원 앞 반전 홍보전에서는 40분 동안 1백40여 명이 서명했고 몇몇 무슬림은 즉석에서 홍보전에 동참하기도 했다.

지금 반전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운동이 직면한 몇몇 쟁점들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첫째, 유엔과 평화유지군 투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부시와 콘돌리자 라이스가 다국적군 투입을 서두르는 것은 헤즈볼라의 완강하고 효과적인 저항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분쇄에 실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헤즈볼라의 저항이 완강하고, 국제적 항의가 거센 상황에서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에게 정치·군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미국에게도 이란과 시리아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시의 전쟁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필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헤즈볼라에게는 군사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방어적 군사 공격은 인정하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이번 결의안은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이란·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군이든 미군이든 유엔군이든 모든 종류의 군사 개입과 점령에 반대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한국 정부의 ‘평화유지군’ 파병도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레바논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피랍된 이스라엘 병사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납치단체들이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7월 14일 외교통상부 성명)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자 노무현 정부는 8월 14일 이를 환영하며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따라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활동”은 바로 ‘평화유지군’ 파견을 뜻한다.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데다 최근 우



전쟁 발발 후 7월 21일 긴급하게 열린 파병반대국민행동 집회

익들로부터 한미동맹 강화 압력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이 전쟁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강력한 반전·파병반대 운동을 건설해 전쟁광들의 동맹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둘째, 미국이 워낙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쟁과 미국의 관계를 알아채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해외원조 최대 수혜국이다. 미국은 전체 해외원조 예산의 5분의 1을 이스라엘에 쏟아붓고 있다. 이스라엘이 사들이는 무기 가운데 미국산 비율은 80퍼센트가 넘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라크 전쟁의 전초전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부시는 “현재의 위기는 중동에서 자유세력과 테러세력 간 광범한 투쟁의 일환이며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부시의 전쟁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부시의 패권 전략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헤즈볼라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반전 서명을 하는 무슬림 여성 (이태원 이슬람성원 앞 반전 홍보전)

쟁점 가운데 하나다.

부시는 영국의 항공기 테러 공격 계획 적발 직후, “우리는 미국을 파괴하려는 이슬람 파시스트들과 전쟁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이슬람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슬람 혐오”는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내 억압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공동전선

맑스주의자들은 종교가 때로는 지배 체제에 맞서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게다가 헤즈볼라는 매우 세속적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는 투쟁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는 민족해방운동을 “무조건, 그러나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은 헤즈볼라가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을 반전 공동전선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반전 운동은 전쟁 반대라는 비교적 협소한 쟁점을 둘러싼 공동 행동을 위한 것이므로, 이 안에는 평화주의자들도 광범하게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헤즈볼라와 레바논 무장 저항의 지지를 운동 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다면 운동은 분열할 것이다(<맞불> 웹사이트 ‘중동 위기의 핵심 쟁점’ 참조).

사실, 헤즈볼라의 무장 저항이 이스라엘 저지의 핵심 관건이라고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헤즈볼라의 무장 저항은 중요하지만, 헤즈볼라와 세계 4위인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된다.

헤즈볼라의 저항뿐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에서의 저항과 서방에서 벌어지는 반전 운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베트남인들의 저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항의 운동과 미군 사병 항명사건들이 미국에게 패배를 안겨 줬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운동 안에는 레바논 전쟁을 팽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보다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꽤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팽택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자신의 힘을 쏟고 있는 전략적 집중점인 중동의 중요성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불안정들과 단순 병렬할 수는 없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중동에서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좌파들이 ‘다함께’가 팽택 투쟁에 (열의있게) 참가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다함께’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팽택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중요한 행동에 빠지지 않고 참가해 왔다. 올해 5월 4일 대추분교가 경찰에 점령당했을 때도, 우리 회원 1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됐다. 무엇보다 ‘다함께’는 그 운동 안에서 팽택 투쟁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대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는 정치적 분석을 내놓고 둘을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권력과 한국 정부 권력이 존재하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대중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안에서도 서울 시위에서 두 요구들을 결합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FTA 반대라는 중요한 투쟁도 있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의 전쟁몰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군사적 표현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이 FTA 반대 투쟁에 참가해 반전 운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FTA 반대 투쟁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듯한 동지들처럼 둘을 대립시키기보다는 서로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하고자 참용성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단결시킬 수 있을까?

바셈 치트(레바논의 민주화 운동가)

레바논에서 학살과 살육이 자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평범한 레바논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종교적 종파주의의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레바논이 여전히 내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며 레바논인들의 종파적 증오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레바논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 착오였다.

평범한 레바논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저항하며 다시 단결하고 있다. 15년간(1975~90년) 내전을 겪으며 사라진 듯했던 단결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레바논인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에 맞서 투쟁하는 헤즈볼라를 지지한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레바논 사회의 중요한 모순, 즉 계급과 종파 사이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험

헤즈볼라는 저항을 주도하면서 순전히 종파적인 정당에서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여전히 시아파 무슬림 공동체를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는 운동이다. 헤즈볼라는 저항의 정당이지 혁명정당이 아니다. 그러나 질베르 아슈카르[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이론가]처럼 헤즈볼라의 특징을 “철저하게 부르주아적인 사회 구성”에서 찾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헤즈볼라는 시아파가 승리자라기 보다는 패배자인 종교적 종파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베이루트 동부의 빈민가에서 자랐다. 그 곳은 내전 기간에 우익 기독교 민병대가 최초의 종파적 학살을 자행한 끔찍하게 가난한 지역이다.

헤즈볼라가 장관을 두 명이나 배출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헤즈볼라는 노동부를 통제하게 되자마자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노동권을 금지한 법규를 폐지하고 농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벌였다.

헤즈볼라의 지지 기반이 레바논 사회의 상대적 빈곤 계층들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에는 노조 활동가들과 상근 간부층이 존재한다. 그들은 최근의 노동쟁의들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대

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상점 주인들과 중소기업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이 점은 헤즈볼라가 학교에 제공하는 수업료의 일부를 시아파 공동체의 상대적 부유층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 덕분에 헤즈볼라는 그 지지 기반 외의 층에도 확보했지만, 그 정치 이데올로기와 지도력은 시아파 종교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써 왔다. 그런데 레바논 사회 자체가 바뀌고 있다. 내전 전에 레바논인의 대다수가 농촌에 살면서 토지를耕作했다. 이제는 대략 인구의 3분의 2가 베이루트에 거주한다. 비록 주민의 대다수가 이런저런 종파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 작업장에서는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종교적 종파주의는 단지 종교 집단 간의 증오가 표출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한 집단에 특권을 보장하고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체제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내전 기간에 평범한 대중은 빈곤과 불행에 시달려야 했다. 굶주림은 종교적 정체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레바논 사회의 가장 큰 분열은 종교가 아니라 계급에 따른 분열이다.

이스라엘 공격의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모든 공동체에서 높아진 것은 종교적 종파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널리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단결 염원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반대하는 운동의 성장이나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분노에 반영됐다. 지금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레바논 노동자 50만 명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런 단결은 여러 해 동안 건설돼 왔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는 저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로버트 페이프(Robert Pape)[미국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가 1980년대에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 레바논인 자살폭탄 공격자 41명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 “겨우 8명만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었다. 27명은 레바논 공산당, 아랍사회주의연합 같은 좌파 정치단체 출신이었다. 세 명은 기독교도였다. 그들은 모두 레바논 태생이었다.”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든 간에 지금 레바논은 호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스라엘에 맞선 전면적 저항의 핵심인 숭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특정 공동체를 뛰어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달에 그런 운동의 가능성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 레바논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힐끗 보았다.

중동 민중 저항의 역사

사이먼 아사프
아랍계 영국인 사회주의자

아랍 세계는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급진화를 경험했다. 당시에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반대 투쟁은 마치 중동의 새 시대를 예고하는 듯했다.

아랍 민족주의의 가치 아래 혁명이 일어났다. 이라크에서는 1968년에 친영 왕정이 무너졌다. 이집트에서는 급진파 장교 가말 압델 나세르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다.

민중 혁명이 시리아·예멘·리비아·알제리를 휩쓸었고, 민중 항쟁이 레바논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흔들었다.

이런 투쟁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쳤고, 제1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프랑스·영국이 심어 놓은 식민지 정권들과, 제국주의에 협력한 지주들이나 공장소유주 계급을 위협했다.

이런 운동의 핵심에는 흔히 공산당이 지도한 아랍 노동계급이 있었다.

그러나 옛 소련에 얽매인 공산당 때문에 운동은 엇나가고 말았다. 공산당은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등장한 민족주의 운동들이 마치 사회주의 운동인 양 묘사했다.

그래서 이집트 공산당은 스스로 당을 해체하고 나세르의 정당으로 들어갔고, 이라크 공산당은 새 민족주의 정권에 수용하다가 결국은 분쇄당했다.

1962년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끝낸 알제리 운동은 1965년에 독립 투쟁의 지도자 이흐메드 벤 벨라가 쿠데타로 쫓겨나자 중단되고 말았다.

반정부 세력은 짓밟혔고, 민주주의의 전망이 사라진 자리에 옛 소련의 사회 체제를 본뜬 일당 독재 국가가 들어섰다.

혁명이 옛 질서를 쓸어버렸지만, 급진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식민주의는 패배했지만 자본주의는 여

전히 그대로였다.

새 정권들은 제국주의와 화해했다.

1967년쯤 되자 좌파는 지하로 들어가야 했고,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시리아·요르단을 패퇴시키자 아랍 혁명의 전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1970년대 내내 아랍 정권들은 일련의 긴축 정책들을 실시했고, 이것은 대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77년에 이집트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강요한 물가 인상 때문에 몇 주 동안 폭동이 일어나 온 나라를 흔들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아랍 정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했다. 1988년에 알제리에서는 대중의 분노가 민중 항쟁으로 폭발했다.

1990년대가 되자 아랍 혁명의 후계자들은 국유 산업들을 사유화하기 시작했고, 국가 관료들과 그 자녀들이 새 소유주가 됐다.

오늘날 이집트에는 백만장자가 수백 명이나 되지만, 보통의 대중은 점점 더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똑같은 독재자들 또는 그들의 아들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50년 전에 변화를 약속했던 운동들은 사멸하지 않았다. 2002년에 중동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방 침략에 항의했다. 시위대는 시위 진압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부딪혔다.

막강한 이스라엘군에 맞서 싸우는 레바논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지금 또다시 아랍 정권들의 거짓말을 들춰내고 있다. 이런 저항은 어쩌면 그들을 쓸어버릴지도 모른다.

1면에서 계속

선제공격의 전주곡”으로 여긴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를 우리가 부시와 이스라엘의 전쟁몰이에 맞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줄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필요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긴급해졌다.

반전 운동은 서방 강대국과 이스라엘의 책략에 속지 말고 이스라엘군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철수를 요구해야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점령군인 ‘평화유지군’ 투입에도 반대해야 한다.

중동 문제의 이해를 돕는 소책자



강탈국가, 이스라엘

존 로즈 지음
2,000원



이스라엘, 제국주의, 팔레스타인 항쟁

앤 일렉스터 지음
1,200원

■ 인터뷰

레바논 현지에 다녀온 유해진 PD가 전쟁의 실상을 말한다

“레바논 남부는 거의 쓸데없이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게다가 국제법으로 공격이 금지된 기간시설, 적십자 차량, 언론인, 유엔 기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법으로 공격이 금지된 기간시설, 적십자 차량, 언론인, 유엔 기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그쳐 하나의 테러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만난 헤즈볼라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서구 편향의 일면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미 제도권 정치에 진입해 23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 개의 학교와 병원을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는 등 각종 사회복지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W의 유해진 PD

국민의 87퍼센트까지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것은 반미성향이 강한 중동에 친미정부를 세우려는 미국의 ‘새로운 중동질서 구축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레바논의 수많은 희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장기적 계획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레바논에 대한 UN 평화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카나 폭격 이후] 국제적 압력 때문에 48시간 폭격을 중지하겠다고 약속도 [이스라엘이] 겨우 한 시간 반만에 깨뜨린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무작정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산 속에서 UN 결의안에 합의했을 거고 계산이 바뀔다면 언제 또 공격을 재개할지 모릅니다. 미국도 국제적 비난 여론에 밀려 단기적 태도를 수정했지만 궁극적인 자신들의 목표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레바논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 채 단기적 참복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뷰 정리 김용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김하영

전직 국방장관들, 한나라당, ‘조·중·동’ 등 우익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의사를 거스른 것이므로 한미동맹이 결판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명백한 데마고기, 곧 감정적 거짓 선동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재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는 또한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민화협 상임의장(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이 지적했듯이, “전 세계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전시작통권은 족쇄”이다.

한편, 노무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우익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 왔으면서 단지 노무현 정권 때리기 차원에서 환수에 반대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우익은 버림받을까 봐 겁에 잔뜩 질려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려는 아이처럼 미국에 딱 달라붙으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1950년 1월 한반도에서 발을 뺀 미국 정부 장관 애치슨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애치슨라인). 만일 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노심초사하면서 말이다.

전부터 우익은 자주국방이라는 대의를 원칙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같은 구체적 시행을 앞두고는 늘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1983년에 전두환 정권은 북한과 군사 균형을 이루는 데 3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고, 1980년대 말에 노태우 정권은 1996년이 나 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도 1999년에 우익을 의식해 이 시기를 다시 2010년으로 미뤘다.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우익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핵무장이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을 이것저것 나열한 뒤, “다 준비해도 핵억지력이 필수”라는 호전적인 말로 마무리지었다.

‘핵 억지력’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정부가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 민중에게, 제 나라 군대를 제 나라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대국에 대한 굴욕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소하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만이 관련돼 있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억제 및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남한 내 장기 주둔을 보장함으로써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원만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우익에 맞서기 위해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남한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뒷받침하는 동맹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전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국방비 증액에 열심이었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에 단력을 주는 좋은 명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작전통수권을 환수하면 작계5027 등을 폐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일각의 기대는 착각이다. 전시작전통수권 환수가 전략적 유연성과 맥을 같이하는 한 오히려 한반도 안보는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군비경쟁과 세계적·지역적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남한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 분쟁 개입을 위한 미국의 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대량해고 반대 파업에 돌입한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9백 86명 대량해고 시도에 맞서 지난 1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별도로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 명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면파업에 이어 8월 16일부터는 창원과 정비지부 조합원들이 합류하는 평택공장 점거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됐다. 그 후 1년 반 동안 사측은 약속했던 투자도 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왔다.

상하이자동차가 대량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경영적자도 근거가 없다. 쌍용자동차의 올 2분기 영업실적은 7천8백32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7.3퍼센트 증가했으며, 1백52억 흑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쌍용차는 작년을 제외하고는 근래 3년 동안 기록적인 흑자

를 봤다.

쌍용차의 사례는 2년 가까이 청산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오리온전기 사례와 흡사하다. 매틀린패터슨은 오리온전기 인수 후 투자와 영업을 일절하지 않은 채, 6개월 만에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했다.

이번 투쟁은 그 동안 누적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투쟁 의지가 대단히 높다. 우파적 성향의 부패한 집행부의 위원장이 급식업체 선정 비리로 구속된 상황인데도 최근 파업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이 같은 광범한 압력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술 유출 저지’ 구호에 집착하며 대량해고 반대 요구를 덜 부각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문제를 노조 지도부가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이 분열하면 사측에게 득이 될 것이다.

또한 공장 점거 파업은 재고 상태의 완성차 출고 저지 행동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강력한 파업으로써만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정종남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반대 집회

지난 13일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규탄하는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인들, 미국에서 반이민법 반대 시위를 조직했던 활동가들, 호주에서 이주자 방어 운동을 조직했던 노조 운동가 등 약 4백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주노동자 방어 연합체인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이 집회를 주최해,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다.

이는 고용허가제에 맞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노협’은 여전히 고용허가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또, ‘외노협’은 연대회의의 소속 단체이면서도 자꾸 운동의 단결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외노협’은 지난 4월 30일 코스콘 셸림 사망 규탄 집회 때도 같은 시간에 따로 집회를 연 적이 있다.

지역 사회포럼

남부지역

불붙는 중동: 이스라엘과 미국은 왜 전쟁을 벌이는가?
8월 28일(월) 오후 8시
장소: 전교조 서울본부(이수역 7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495-9925

서부지역

레바논 전쟁, 헤즈볼라 그리고 제국주의
8월 29일(화) 오후 7시 45분
장소: 토즈(신촌역 3번 출구 50미터 스타벅스 건물 4층)
참가비: 3천 원
문의: 011-9997-9084

중부지역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8월 31일(목) 오후 8시
장소: 명동향린교회(명동성당 앞 골목)
연사: 정성진(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대학 맑스주의 포럼은 대학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9월 포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010-2752-2003, atgstudent@hanmail.net

〈맞불〉창간 축하메시지

신자유주의의 칼바람이 민중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분야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사회를 가진 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려하는 지배자들·권력자들·자본주의자들의 집요함과 광포함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 또한 더 광범위하고 더 깊게 이루어져야 할

니다.

지배자들의 음모와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분쇄할 있도록 우리들의 실천은 과학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내어 지배자들에 대한 강력한 〈맞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신문 〈맞불〉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의 〈맞불〉을 조직하는 조직가·선전가·행동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맞불〉을

정기 구독하십시오



썬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썬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한겨레21〉 ‘민주노동당을 충격에 빠뜨려라’에 대한 반론

민주노동당을 댐에 빠뜨리려는가?

지방선거의 아쉬운 결과 이후 민주노동당의 혁신 방향과 진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21〉 제 622호의 특집 ‘민주노동당을 충격에 빠뜨려라’도 그 중 하나다.

〈한겨레21〉은 “민주노동당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서 소외돼 있다”며 당원들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고 이 참에 “당을 확 흔들어 버려야” 한다며 당내 우파의 목소리를 키워 주고 있다.

물론 당의 몇몇 잘못들 —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대응과 이번 지방선거 때 일부 후보가 저지른 부정선거운동 등 — 을 지적한 것은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한겨레21〉이 제시하는 길은 당을 댐으로 끌고 갈 위험이 크다.

먼저, 〈한겨레21〉은 “민주노동총과의 관계설정 문제는 대중정당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좁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의 토양이자 최대 지분을 가진 민주노동총이 이제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울산 민심 탐방’ 기사는 “노동당은 노사분규당”, “노동자들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서민들 좀 생각하라고 하소”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당에게 포퓰리즘적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출렁이게” 한다며 마치 대기업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암시한다.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을 방어하는 민주노동총의 광고에 부정적으로 “삼성이 언급됐다”며 심기를 거부했던 〈한겨레〉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 운운하는 것은 낮간지러운 일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역시 이번 〈한겨레21〉 기고에서 정규직 노조 양보론을 암시했다. 그는 지난 9일 의원단워크숍 발제문에서도 대기업 노조를 “부동산 재벌 대기업, 의료 재벌, 사교육 재벌”과 싸잡아서 “과도한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에게 “피해 대중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임금’의 도입 등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노동귀족론’으로 노동자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려는 지배자들의 의도를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 대기업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위축시켜 투쟁을 억누르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을 비판해야 한다.

〈한겨레21〉은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노동자 투쟁에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듯하다

〈한겨레21〉은 또, 부유세 공약 등이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당이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여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회운동단체’

그러나 부유세, 무상의료 같은 당의 대표적 공약들은 기득권 세력의 대폭적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좋은 구호에 머물 공산이 크다.

만약 〈한겨레21〉이 말하는 정책의 “구체화”·“현실화”가 기성 권력자 집단에 양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의 공약을 더욱 가망없는 것으

로 만들 뿐이다. 당의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은 대중투쟁을 고무하고 건설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점에서 〈한겨레21〉식의 주장과는 반대로 당의 ‘사회운동단체적 성격’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또, 〈한겨레21〉은 당 위기의 한 요인으로 “정파 간 대립과 긴장”과 “당내 정치의 과잉”을 꼽는다. 물론 당내 분파주의는 해악적이다. 그러나 〈한겨레21〉은 이로부터 잘못된 대안을 내놓는다. “당직·공직 후보 선출권이 당원에게만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 대중이 참여할 틈이 없”으니 기성 부르주아 정당처럼 ‘국민참여경선제’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 예비선거]를 도입해 “대중과 거리감”을 줄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의 장점을 버리고 부르주아 정당들의 약점을 취하라는 것이다. 부르주아 정당들의 ‘국민참여 경선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들의 ‘국민참여경선제’는 부분적으로는 비민주적인 당 구조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출된 후보들이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최근 열우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생쇼를 해도 지지율은 추풍낙엽인 것이다.

민주적 구조인 당의 진성당원제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좀더 커다란 위험이 있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 당의 후보들은 대중투쟁보다는 부르주아적 명망을 쫓아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것은 당의 우경화를 촉진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는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혁신의 방향은 〈한겨레21〉이 암시하는 것처럼 당이 주류 정당과 비슷해지고, 노동계급 기반에서 멀어지고, 사회운동적 성격을 희석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에 있다.

한규한

8월 25일 민주노동총 임시 대의원대회

민주노동총 지도부는 8월 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조직혁신안과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 등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순회 대표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일 낮에 진행되는 설명회들은 조합원의 참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먼저 조직혁신안은 현장조합원 민주주의를 고무하기보다 가로막는 것이다. 지도부 직선제 요구는 외면됐다. 민주노동총 파견대의원 간선제(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다시 파견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와 편법적 대의원 지명(단위 노조·연맹 임원들이 임의로 파견대의원을

을 지명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되려 파견대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한다(5백 명당 1명에서 1천 명당 1명으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의원 할당제 도입 내용도 없다.

반면, 정부의 입김은 늘어난다. 현재 건물 임차료에만 받던 국고보조금을 비정규직 조직 사업, 교육 사업 등에도 받게겠다는 것이다. 재정적 의존은 정치적인 타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자주성을 엄격히 유지하면서 받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확대·탄압하는 정부의

돈으로 비정규직 조직 사업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은 현재 그 내용이 모호하므로 추진이 시기상조다. 게다가 자칫하면 상설연대체 건설은 역사 속에서 재앙으로 입증된 민중전선 전략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민중전선 전략은 계급 연합을 추구함으로써 반동에 직면해 노동자 투쟁을 마비시킨다. 또, 민중전선 전략은 ‘전선체는 대중투쟁, 당은 의회 활동’ 식의 분업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화를 조장할 수 있다(자세한 것은 ‘다함께’ 김하영 운영위원이 쓴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참조).

민주노동총 지도부는 막상 하반기 투쟁건설 계획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투쟁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할 뜻은 변함이 없다. 포항에서 본색을 드러낸 ‘노동자 살인정부’와 여전히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투사들은 직선제 도입 등 노동조합 조직구조 문제에만 치중하기보다 대안적인 전략 제시와 건설에 더 치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형식도,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활동과 투쟁 속에서 생기는 자신감과 민주주의에는 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지윤

노동운동의 투쟁과 혁신을 위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랍거리의 분노

이스라엘의 야만적 침략에 맞선 헤즈볼라와 레바논인들의 영웅적 저항이 중동 민중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이집트·요르단·이라크·이란을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주요 아랍 정부들의 헤즈볼라 비난에 분노했고, 레바논인들의 희생에 말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막상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더 분노했다.

유엔 인도지원 사무차장 얀 에겔란트는 “중동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동 민중 다수는 언제나 미국과 이스라엘 제국주의를 증오했다. 그러나 동시에 제국주의의 힘을 두려워해 왔다. 사람들은 자국 지배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헤즈볼라는 제국주의의 계획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동 민중은 바로 이 점에 열광하고 있다.

지금 중동 전역에서 신속하게 시위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 십수 년 간 중동 민중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다.

먼저, 두 차례의 인티파다가 있었다. 중동 민중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운동을 조직한 반면 각국 지배자들은 이스라엘과 타협했다.

둘째, 이 비굴한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개혁’ 때문에 중동 민중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민중은 미국과 유엔이 10년 동안 이라크를 제재하면서 1백50만 명 이상이 죽는 것을 보았고, 2003년에 미국이 그렇게 폐허가 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봤다.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는 수십 년 간 중동에서 일어난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 중 하나였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점령 이후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국이 결코 천하무적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수천 명의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과 아랍 정부의 무능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허점을 보고 있다.

이것은 자국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 온 말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에 속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정당성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

이집트

최근 이집트 시위는 중동의 불안정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이집트에서는 8월 첫 주에만 전국에서 수

만 명이 이스라엘 규탄 집회에 참가했고, 지난 주에도 키파야 등이 조직한 시위가 전국에서 열렸다. 이집트의 주간지 <알야람 위클리>의 보도를 보면 이런 집회에서 호응을 얻은 구호들은 단지 이스라엘 규탄 구호만이 아니었다.

“무바라크는 물러나라”든가, 최근 생필품 가격 ‘자유화’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무바라크, 너 때문에 우리가 깡통을 차게 뒀다!”라든가, 또는 신자유주의와 미국 제국주의를 동시에 거부하는 구호인 “세계는 행도, CIA도 우리 삶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구호들이 인기를 끌었다.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이집트가 하는 구실이나 이집트라는 국가가 중동에서 차지

하고 있는 위상을 고려해 보면, 이집트에서 운동이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50~60년대에 이집트는 아랍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 투쟁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제국주의는 이집트를 굴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1977년에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는 중동 정부 중 최초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랍민족주의의 실패로 여겼다.

그 뒤로 이집트는 친미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는 1991년 걸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국 정부와 다른 중동 정부들 사이의 ‘이전’을 중재하는 구실을 했다. 또,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의 파타와 하마스 등에게 이스라엘과 협상하도록 종용했다.

다른 한편, 이집트는 중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지정학적 요충지여서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 전역에 영향을 미쳐 왔다. 과거에 이집트 공산당이나 나세르의 아랍민족주의는 중동 민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현재는 키파야라는 역동적인 민주화 운동이 그런 구실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존 리즈는 이집트 운동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가 타도된다면, 이것은 헤즈볼라의 승리를 포함한 다른 어떤 상황전개보다도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이집트 운동의 주관적 역량이다. 키파야 운동은 가능성을 보여 줬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 안에 있는 좌파들이 무슬림형제단을 포함해 운동의 외연을 넓히고 단결을 유지하면서도 운동을 한 차원 더 급진화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노동계급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가이다. 이집트 좌파는 커다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김용욱

하중근 열사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노무현 살인정부

노무현 정권의 탄압에 하중근 열사를 잃고 58명의 조합원을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포항건설노조 3천5백여 명의 조합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사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포항건설노조 교섭단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평균 5.2퍼센트 인상, 토요일근무 할증 강화 등 6개항에 잠정 합의했으나, 투쟁본부 회의에서 “사측이 내놓은 최종안은 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이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금 포항에서는 포스코의 “경비견”인 경찰이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낳은 살인

적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보상 등의 요구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중근 살해공범 포스코는 뺨뺨스럽게 노조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8월 9일 집회 때도 포항의 거리는 노동자들의 피로 물들었다. 1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5명의 민주노총 간부까지 구속됐다. 폭력 진압을 지켜본 포항 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은 이들을 마구 폭행했다.

지금 살인범(경찰)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곡 수사로 악명 높은 국과수는 부검 일주일 만에 감정 결과를 늑장 발표하면서 “(하중근 열사는) 오른쪽 앞머리가 골절돼 숨졌는데, 이는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이 크라며 범죄 은폐에 나섰다. “단순히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노무현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안희정, 신계륜 등 자신의 측근들을 모조리 복권시켜 주는 8·15 사면자 명단을 발표했지만,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투쟁해 온 1백9명의 구속노동자들은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

유청하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Counterfire

http://www.counterfire.or.kr

지면 관계상 신문에 실리지 않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쟁” 관련 기사를 <맞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레바논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레바논 민중의 분노”, 존 리즈(영국 전쟁 저지연합)의 “중동 위기의 핵심 쟁점” 등이 실렸습니다.

그 밖의 국제 기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